

#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12
----------	-----

제출연월일 : 2021. 4. 13.

제안자 : 남양주시장

## 1. 제안이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기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동일한 재산세 감면을 적용받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항에 대하여는 감면기한을 연장코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항에 대하여 감면기한 연장

- 1) 2021년 12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 2) 안 제2조제1항,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9조

### 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 (안 제10조 신설)

- 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재산세 50% 감면
- 2) 실효기간이 없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 제외
- 3)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재산세 50% 감면조항 신설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

### 다. 조문정비(안 제2조제4항)

- 1)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 “자동차세”
- 2) 시세 관련 조례에 불필요한 취득세(도세) 세목 삭제

## 3. 개정조례안: 별첨

## 4. 비용추계서: 붙임 1

##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제4항 중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세”로 한다.

제4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0조를 제11조로 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 건축물, 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제11조 앞에 “제3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제3장 보칙”을 삽입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 2. (생략)

②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조(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감)

[illegible]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 동 차 세

제4조(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감)

면)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 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 -----  
-----  
-----  
2023년 12월 31일-----  
-----  
-----  
-----.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  
-----  
-----  
-----  
-----  
-----  
2023년 12월 31일-----  
-----  
-----  
-----  
-----  
-----  
-----  
-----  
-----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 3. (생략)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

-----

-----

-----

-----

-----

-----

-----

----- 2023년 12월 31일-----

-----

-----

-----

-----

-----

-----

-----.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

-----

-----

-----

-----

-----

-----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신 설>

제10조 (생략)

제3장 보칙

<신 설>

제11조 ~ 제18조 (생략)

-----  
-----  
-----  
----- 2023  
년 12월 31일-----.

제10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 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 건축물, 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삭 제>

제3장 보칙

제12조 ~ 제19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일몰기한 연장에 따른 시세조례 및 시행규칙, 시세감면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재정수반 요인이 없음

※ 주요 개정내용

○ 지방세 시세 조례 및 시행규칙

- 주민세 과세체계 및 용어를 개편
- 단순조문 정비

○ 지방세 감면 조례

-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 신설<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감면 일몰기한 연장(5개 조항 적용)

###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단순 과세체계 및 용어 정비, 감면 규정 신설에 해당)

### 4. 작성자

산업경제국 세정과장 유희근